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업무

2019.3.



목 차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1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5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	9
1. 2019년 역점 추진과제	10
①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②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·벤처국가 실현 ③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·자영업의 혁신을 뒷받침 ④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가속화	
2. 쟁점(갈등) 과제	21
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	
3. 신규 발굴 과제	23
⑥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	
Ⅳ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	27

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1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□ <mark>정책방향</mark> : ^①민간주도, ^②일자리 중심, ^③상생혁신의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고, 업계 목소리를 반영 ('18년 40개 정책, 82회 현장방문)

□ 핵심정책 실적 및 성과

- ① **(스마트 공장)** 중소 제조업에 **스마트 공장 도입**(7,903개, ~'18년)을 통해 제조혁신·산단혁신·일터혁신을 추진
- 도입 기업의 생산성(30.0%↑), 불량률(43.5%↓), 고용창출(2.2명/기업↑) 등
 성과를 창출하고, 대기업 등의 상생형 모델이 확산*
 - * 삼성전자 500억원 2,500개사('18년 100억원 500개사) 현대차 7.6억원 40개사 등
- ⇒ 성과가 우수하여 국정과제 목표 상향('22년까지 2만개 → 3만개)
- ② **(벤처투자) 민간제안펀드** 신설(4,077억원), 모태펀드 **추경 출자**(18년 2,500억원), **소설벤처펀드** 신설(1,042억원)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추진
- '18년 **벤처투자** 3조 4,249억원, **펀드조성** 4조 6,868억원, 투자금 **회수** 2조 6,780억원을 달성하여,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치 성과
- ③ (유니콘 기업) 혁신모험펀드 10조원(~'20년, '18년 3.5조원), 벤처업계 제안 수용(규제완화 등 129건 정책에 반영) 등을 통해 창업·벤처의 성장 촉진
 - 유니콘('17. 3개→**19.1. 6개**)/ 천억 벤처(513→572개) 및 **1조원 벤처**(4→11개) 증가
- ④ (연대보증 등)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('18.4~), 채무감면 등 추진
 - 신규 대출·보증 폐지 : ('17) 2.9 → ('18) 12조원 (전년 대비 **311**%↑)
 - 정책금융기관의 **부실채권 1.4조원을 정리하여 2만명**에게 재도전 기회 부여
- ⑤ (창업) 민간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('18.2~), 메이커스페이스 신설(65개), 창업부담금(12→16종) · 세제감면 확대 등을 추진
 - 신설법인이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고, 창업환경이 전반적으로 호전
 * 신설법인(천개): ('10) 60→('13) 76→('16) 96→('17) 98→('18) 102
- ⑥ (기술금융) 매출액 없어도 기술 있는 기업에 과감히 정책금융 공급
- 매출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 증가('17.5333 → '18.6938억원, 전년비 31%↑, 기보)

- ⑦ (사내벤처 육성)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
 - LG U+, SK하이닉스 등 **12**개 대기업(전년대비 60%↑) 신규 참여
- ⑧ (규제혁신) 규제자유특구 도입 특구법 개정(18.10) 등 규제개선을 추진
 - OECD국가 중 규제영향분석 법률분야 3위('15년 13위), 하위법령 4위('15년 12위)
- ⑨ (적극적 구매)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의 위원회가 공공기관 구매결정을 대행하는 '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' 신설('18.5)
 - **126개 제품, 268억원** 구매, 참여 공공기관 확대('18.5. 6개→12월 60개)
- ① (수출 촉진) 온라인수출 지원('18. 2,025개), 수출애로 해소(4,377건) 등 추진
 - 온라인 수출이 늘어나고, 간접성과로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
 - * 온라인수출(억\$):('17) 26.8 →('18) 35.4 中企수출(억\$):('17) 1,061→('18) 1,146
- ① (고용)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신설(18.6, 5년후 3천만원 목돈 마련) 과감한 인건비 지원(중소기업에 최대 2,100만원/청년고용) 등을 추진
 -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(36,031명 신규 가입) 및 고용보험 가입자
 ('17. 1,294→'18. 1,341만명)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
- ② (넛지방식 상생협력) 수탁기업 상생결제 지급의무화('18.3), 상생기금 출연근거 마련('18.5)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상생협력을 촉진
 - 상생결제가 최초로 연 100조원 돌파(107.4조원), 상생기금 출연이
 연간 2,000억원을 달성(2,013억원)하여 누적 1조원 돌파(1조 67억원)
- ③ (공정경제)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 최초 실시(유통 PB, '18.1월), 부당 경영 정보요구 금지('18.12월, 상생법),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설('18.6월) 등 추진
- 대기업 직권조사 통해 **부당감액 9.6억원 해결**하였고, 기술탈취 정책은 도움 된다는 업계 평가(도움 41.9% vs. 도움안됨 13.8%, 중기중앙회)
- (소상공인·자영업) 매출은 늘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방위 지원을 통해 '18년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삼음
 - * ①일자리안정자금, 사회보험료 등 11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②카드수수료 인하· 세제혜택 등으로 1.6조원 절감 ③융자·보증 등 6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등 지원
- ⑤ **(전통시장) 주차장 건립**(누적, 1,078개), **화재알림시설** 구축(255곳) 및 안전지킴이 지정(300곳),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등을 추진
- **주차장** 보급률 증가(전년 대비 2.5%p ↑), **화재 피해 감소**('17. 68.2 → '18. 13.4, 전년 대비 건당 55백만원 감소) 등 전통시장 쇼핑환경·안전성 개선

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□ 업무 추진여건

- (경제성장) 주요국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에도 한국은 소폭 증가 예상
 - * 경제성장률(IMF, %) : 한국 2.7→2.8, 미국 2.9→2.5, 중국 6.6→6.2, 유로 1.8→1.6
- (창업·벤처) 벤처투자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제2의 벤처 붐을 기대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
 - 유니콘 기업, 매출 1천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
- (중소기업)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하락전망이나, 대규모 투자(반도체 등) 및 주력산업 구조조정 마무리 등으로 생산은 증가 예상
 - * 中企 경기전망지수(중기중앙회): ('17.1) 81.7 → ('18.1) 84.3 → ('19.1) 80.9
 - * 中企 제조업 생산증가율(통계청, 중기연) ('17) 2.5 → ('18e) -1.6 → ('19e) 0.9
 -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·복지수준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는 여전하나,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여건은 개선 예상
 - * 中企 취업자수 증감(통계청·중기연, 만명) : ('17) 31.8 → ('18) 4.8 → ('19°) 10.9
- (소상공인·자영업) 체감경기는 부진할 전망이나, 가계소비 증가, '18년 대책(카드수수료, 세금감면 등)의 정책효과 발생 등은 긍정적임
 - *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(BSI, 소진공) : (`17.1) 94.4 → (`18.1) 87.5 → (`19.1) 82.3

□ 업무 추진방향

- ① "민간 주도 + 정부 후원" 방식과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제2의 벤처붐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
 - 신산업 진출,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병행
- ② 스마트공장 및 제조혁신을 통해 생산성ㆍ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
 - 정주여건 개선, 일자리 정책 확대 등 **인력 미스매치 해결 본격** 추진
- ③ 소상공인·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삼아 차원이 다르게 육성
 - 비용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면서 신제품개발 - 공동마케팅 등 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

Ш

주요업무 추진계획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비전

활력 중소기업, 함께 잘사는 나라

방 향

- ◈ 민간 주도- 정부 후원 방식으로 정책 개편
- ◈ 중소 제조업 혁신을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
- ◈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차원이 다르게 육성

역점 과제

- □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
- ②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·벤처국가 실현
- ③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혁신을 뒷받침
- ④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가속화

쟁점 과제

5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영역 보호

신규 과제

⑥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생태계 조성

(행정혁신)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최고 정책서비스 제공

1 2019년 역점 추진과제

□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

개 요

- □ <u>현황</u> :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으로 중소 제조혁신의 가능성이 크게 고조
- □ **추진방향** : 스마트공장 보급 및 R&D·금융·공공구매·수출 등을 종합 지원하여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質 좋은 일자리 창출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- □ 스마트 공장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(2만개→3만개, ~'22)
 - '**19**년 예산을 대폭 **증액하여 4천개 보급**('18. 1,330→'19. 3,428억원, 2.6배↑)
 - 지원단가가 비현실적이라는 **업계 의견을 반영**하여 기업당 금액을 **2배로 상향** (0.5~1억원/기업당 → 1~1.5억원/기업당)
 - 정책자금 2조원 및 투자 3천억원 조성 등 자금-판로 등을 **일관 지원**
 - 민간 주도의 상생형 협업모델을 더욱 확산
 - * '19년 계획 : 삼성 100억원, 현대차 58억원, 삼성디스플레이 10억원, 포스코 20억원, 대한상의 100억원, 표준협회 50억원 등
 - 공장・산단・일터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의 상시 혁신 체계 구축(19개 TP에 제조혁신 센터 신설)
 - * 스마트공장 보급의 허브역할, 각종 애로해소, 시범공장 발굴 등 역할
 - 전문학사·대학원 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명 양성



□ '민간이 주도'하는 방식으로 R&D 정책을 개편

- R&D 지원 대상 선정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·추진
 - 시장에서 검증된 창업기업의 R&D 지원 비중 확대 ('18. 43 → '19. 62%)
 - * 민간투자 유치, 기술이전, 기술신용평가 (TCB)우수 기업 등
 - 민간이 선별한 우수한 기업에 투자방식으로 R&D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 ('19년 사업방식 구체화 등 → '20년 시행)
 - * 기관투자자와 R&D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R&D 수행 기업에 지분투자하고 투자규모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차등 설계
-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에 중소기업 전용 R&D 지원 확대
 - * '중소기업 전용 R&D 2배 확대(국정과제, ~'22)'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기재부·과기정통부 등과 협력 추진('17. 1.1 → '19. 1.7 → '22. 2조원)
- 기술료 납부방식을 전환(정액→경상)하여 상용화 R&D 특성을 강화
 - * 정액기술료: R&D 이후 정부출연금의 10%를 일률적으로 징수 경상기술료: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발생으로 이어질 때 기술료를 납부

□ 지역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

- **지방중소기업 재직자의 정주여건 개선**을 위해 국토부·지자체·LH 등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* (~'22년, 4만호)
 - * (중기근로자) 1.5만호, (창업·지역전략산업) 0.7만호, (산단형) 1.8만호
- 지방산단 등 **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**에게 목돈(3년 3천만원) 마련, 교통비 지급(월5만원), 전월세자금 저리융자(1억,1.2%) 등 **재정지원**
 - * (신규취업청년) 연간 1,102만원(청년내일채움공제, 주거비 융자, 교통비, 세금감면)
-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·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**청년재직자 내일** 채움공제(5년 3천만원) 가입을 확대(*18. 4만→19. 8만명)하고, 복지혜택 부여
 - * (임금) 연간 902만원(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주거비 융자, 교통비, 세금감면)
 - ** (복지)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 구축 및 복지(의료, 여행,학습,스포츠 등) 포인트 지급 등 추진 검토

□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

- 기술성 우수기업 등이 기업사정에 따라 대출금을 자유롭게 갚는 「정책자금 자율상환」확대('18년 800억원 → '19년 1.1조원)
 - * 최소상환금액(원금의 15%)만 넘으면 대출금을 자유롭게 설계하여 상환
- 기술력과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^{*}은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「특별 심사위원회」의 별도 심사를 거쳐 대출하는 프로그램 신설
 - * 발명특허,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인증 등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된 기업
- **매출이 없으나**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**기술금융** 확대(7,000억원, 기보)
- 혁신적 자금조달을 위한 **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** 채권담보부 중권(P-CBO) 신설 ('19.1,000억원)

□ 혁신제품에 대한 판로 및 글로벌 진출 촉진

- 혁신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한 **공공조달 활성화**('19년 약 92조원 목표)
 - 구매담당자 면책,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(시범구매 실적) 반영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규모 대폭 확대*
 - * 혁신제품 시범구매 : ('18) 268억원 → ('19) 2천억원^e → ('20) 5천억원^e
 - 공공기관의 **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 상향 조정**(10% → 15%)
- 국가대표 공동브랜드('Brand K')를 도입하고, 정부 및 민간과 공동 홍보・마케팅 전개
 - * 공동브랜드 사용 요건(안): ①본사, 생산시설 한국 소재 ②제조비용 60%이상 한국 발생 ③핵심공정 한국 진행 등



-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**온라인 전문몰**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, 품목별 **온라인 전시회** 개최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('19. 5,500개사)
 - * 온라인 수출의 집적·공동물류를 시행하고, 표준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
- 주요 전략지역에 바이어 섭외, 임시 사무소 제공 등을 하는 **수출 BI**를 **확대 개편**하여 해외진출 리스크 완화('19. 2개 신설, 총 23개소)

②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·벤처국가 실현

개 요

□ <u>현황</u> : 지난해 벤처투자 최고실적 달성 등으로 창업·벤처기업 현장 에서는 「제2의 벤처붐」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큼

□ 추진방향

- '19년에는 창업, 투자·회수, 재도전 및 규제혁신 등을 **전방위로** 지원하여 벤처·창업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
- 「창의력이 풍부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」하는 방식으로 추진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- □ 유니콘 기업 등 스타벤처 육성 : 스케일업 생태계 및 규제혁신
 - 해외 유명 벤처캐피탈이 국내 창업·벤처기업에 100% 투자하는 「해외VC 글로벌펀드」3천억원을 조성
 - 창업·벤처기업 글로벌 IR 역량 강화 지원, 해외VC에 정보 제공 및 1:1 만남의 장 등을 마련하여 해외VC의 국내 투자를 촉진
 - **3천억원 규모의 M&A펀드**를 조성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&A시 법인세 감면을 '21년말 까지 연장** (조특법, '19.1 시행)
 - * '19.1월 유니콘 기업이 된「Y」사는 적극적인 M&A로 스케일업 하면서 성장
 - * 기술가치금액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(일몰기한을 '18. → '21.로 연장)
 - 창업 제외업종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'창업지원법'을 전면 개정
 - 신기술·신서비스 스타트업, 유니콘 기업 등이 자유롭게 성장토록 규제제약 없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(7~8월)
 - 자율주행자동차, 수소산업, 에너지신산업, 헬스케어, e-모빌리티 등 신기술·신서비스 업종이 성장 가능한 지역에 규제특례 집중 적용
 - * 규제혁신 3종세트(규제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)+메뉴판식 규제특례(201개) 적용

- 규제특례 적용과 더불어, 재정지원, 세제지원, 부담금 감면을 지원하고, 자금·투자·R&D·마케팅 등을 종합 연계

□ 고급 기술인력의 혁신 창업 활성화

- 대기업 **사내벤처** 및 대학 교원의 **실험실 창업을 활성화**하고 사업화-R&D 등을 일관 지원(교육부·과기부 등 협업)
 - * 사내벤처 확대 : ('18) 40개사(대기업 18개사 포함) → ('19) 60개사(50%↑)
- 청년창업기업의 취득세·재산세 감면시한을 연장*(행안부 협업)하고, 500㎡ 미만의 공장·제조업소의 부담금 면제 절차를 간소화**
 - * (기존) 29세 이하, 창업 4년 내 취득세(75%)·재산세(3년간 100%, 2년간 50%) 감면 → (개선) 일몰연장, 청년 34세 이하, 창업 5년까지 연장, 감면율 유지
 - ** (기존) 사업계획승인→ (개선) 서식 및 절차완화
- **혁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** 시 필요한 사항^{*}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타트업 전용사업 신설
 - * 해외진출전략 수립, B2B·B2C 온·오프라인 마케팅, 해외투자자 매칭, 현지화 지원 등
- **민간주도 창업 프로그램인 '팁스'를 개편**(pre-팁스, post-팁스) 및 확대 ('18년 1,342억원 → '19년 1,621억원)
 - * 성과: 코스닥(티앤알바이오팹), 코넥스(지놈앤컴퍼니) 상장(최초), M&A 2건(레드스톤스토리, 튜터링)

□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확산

-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마중물로 **민간자금을 벤처투자** 시장으로 유입하여 벤처펀드 4.8조원 조성 추진
- 대학・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사업화편드 조성 등을 통해 대학・연구소發 창업을 촉진('19. 300억원, 교육부 등과 협업)
- 민간의 자유로운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, 『벤처투자촉진법』 제정 즉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*을 조속히 마련('19. 상)
 - * 창업 · 벤처기업에 대한 의무투자 산정 기준 및 범위 등 세부내용 구체화
- 투자뿐만 아니라 멘토링 등을 결합하여 기업의 성장을 입체적으로 지원토록, 모범사례 발굴·홍보 및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

□ 지역으로 창업·벤처 열기 확산

- 가점부여 등 **지역 창업기업을 우대**하여 지역별 스타벤처 탄생 유도
 - * 창업사업화 정책의 지역기업 지원 목표 : ('18) 42% → ('19 목표) 47% 이상
- 지방투자재원 확충 및 지역 혁신주체간의 교류·협력 강화
 - 전용펀드 조성 ('19. 1천억원) 및 인센티브* 부여 등으로 지방투자 재원을 확충하고, 지방투자 비중도 '19년 20% ('18. 17%)까지 상향
 - * 지방투자 30% 초과 시 추가성과보수 지급, 창업초기펀드는 20% 이상 지방 투자
 -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기업-대학-투자자 등이 교류하는 지역창업의 거점기관으로 활용
- BI 등 **창업공간** 위치·입주안내 등에 대한 **종합 정보제공 온라인** 플랫폼을 도입('19.2~)하여 수도권 - 지역 간 창업정보 격차 완화
 - * 중기부(혁신센터, 중장년센터, 1인창조센터, BI), 환경부, 국토부, 과기부, 기상청 등 5개 부처 368개 기관에서 12,054개의 창업공간 제공

□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

- 연대보증 면제를 '18년 보다 대폭 확대한 9만여 건 목표
 - * '19년 기존 대출·보증의 연대보증 잔액을 67% 까지 축소하고 '22년까지 전면 폐지
- 공공 정책금융기관(예 : 기술보증기금)이 보유한 오래된 **부실채권**을 **단계적**으로 **정리**('19. 1.2조원)하여 재도전 걸림돌 제거
- 기술력이 우수한 저신용 기업에 특별 자금 및 보증을 공급
 ('19. 900억원)하고, 소액 성실상환 제도*를 신설
 - *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 소액상환 형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, 출자전환 등을 지원하여 재도전·재기를 지원
- 신용회복과 동시에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신설
 - * 재도전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
- □ 1)창업열기 지속 확산, 2)벤처투자 지속 확대, 3)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촉진 등을 포함한 '혁신 벤처·창업 열기 확산방안' 마련 추진('19.3)

③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의 혁신을 뒷받침

개 요

- □ <u>현황</u> : 생계형 창업, 과밀화 등 구조적 요인과 소비의 대형화· 온라인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여건 발생 우려
 - *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/영업이익 추이(만원): ('10) 1,538 / 248 → ('15) 1,863 / 215
- □ <u>추진방향</u> :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**독자 정책대상**으로 **본격 육성하는** 원년으로 매출증대·비용절감 등과 동시에 **자생력 제고 병행**
 - * 소상공인('16) : 314만개 // 자영업자('18) : 564만개로 전체 취업자의 21% 차지 → **「소상공인·자영업 기본법」제정** 추진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□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하는 자영업 육성기반 구축

- 소공인 집적지 내 제품개발, 작업장, 온라인 공동구매·판매,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신설('19. 2곳 → '22. 10곳)
 - 지역 대학·연구소 등과 연계한 신제품 개발, 제품 부가가치 향상,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소공인 혁신 거점으로 조성
-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, 소상공인이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제품을 홍보·판매할 수 있는 '1인 방송 플랫폼' 마련·지원('19. 300개)
 - 소상공인의 1인 방송 콘텐츠 제작·마케팅 등을 도와줄 전문 1인 크리에이터('19. 200명)를 발굴·육성하여, 소상공인과 매칭
- O2O 플랫폼 연계 마케팅, 홈쇼핑 입점,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을 통해 **백년 이상 존속이 가능한 '백년가게**'를 발굴·육성
 - * 혁신성이 우수한 가게(업력 30년↑, 도소매, 음식업)를 1천여개 육성('22년)
- 공동브랜드, 공동 마케팅 등 **협업 강화**를 위해 **협동조합을 규모화** 하고 정책자금 등을 종합 **연계 지원**
 - * 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 육성(개) : ('18) 51 ightarrow ('19) 70 ightarrow ('22) 150개

□ 소상공인·자영업의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유도

- 자영업·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
 2배 이상 확대(1.9조원 → 4조원)하여
 지역 자본의 지역 내 선순환 체계
 마련 및 매출 확대를 지원
 - * 지역상품권 : ('18) 0.37 → ('19) 2조원, 온누리상품권 : ('18) 1.5 → ('19) 2조원



- 상품권 할인(예: 5%) 금액, 이통사·유통대기업 포인트 등을 제로 페이 포인트로 충전, 점포에서 사용하는 「국민 포인트제」도입
- 인건비·보험료 등 **영업비용을 줄여**주어 소득과 이익 증대를 추진
 - * 일자리안정자금·사회보험료·근로장려금(EITC) 등 6.6조원 규모 직접지원, 카드수수료 인하·세제감면 등 1.6조원 등 ('19년 본격 시행)
- 결제수수료 0%대 「제로페이」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소비자· 가맹점 편의제공 확대* 및 소득공제(결제금액의 40%) 등을 본격 시행
 - * POS 연계(4월, 편의점 先도입), 온라인·교통결제·여신기능 도입('19.상) 등

□ 준비된 창업과 원활한 재기·퇴로 지원

- 예비창업자 **1만명**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「튼튼창업 프로그램」도입
 - 저리 융자·보증 등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 영업 유도
 -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(9 → 5%), 환산보증금 상향(60~70 → 95%) 및 계약갱신청구권 연장(5 → 10년) 등을 통해 **안정적 영업권 보장**
-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,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(전국 60개)
 등 폐업 및 재기지원 대폭 확대('18. 115억원 → '19. 412억원)
 - * 채무조정 : (연체 우려) 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 → (연체 중) 채무감면율 확대('18, 29% → '22, 40%이상) → (변제능력 상실)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하는 「특별감면제」도입
 - ** 점포철거·원상복구 지원 확대 : ('18) 500명, 100만원 → ('19) 2,000명, 200만원
 -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취업전환·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재기 유도
 - * 취업전환 : ('18) 8.9 \rightarrow ('19) 20.0천명/ 재창업 : ('18) 3.6 \rightarrow ('19) 6.0천명

□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

-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, 자영업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을 복합상권으로 개발하는 「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」 추진 ('19. 13 → '22. 30곳)
 - 상권특색이 반영된 경관 및 쇼핑·커뮤니티·청년창업·힐링(지역 문화·예술)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성
 - * 고객중심으로 상권 특색을 살리는 상품 구성(예 : 관광연계 디자인 상품개발)
-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상인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안전망은 강화
 -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받는 **시장경영 바우처** 지원사업 도입을 통해 자생력 및 자체 역량 강화
 - * '19년 165억원, 340곳 내외(최대 60백만원 한도)
 - 전통시장 공용구간과 개별점포의 **노후화 전기설비 개선**(57곳) 및 **화재알림**시스템 설치(24,000개)
 - 전통시장 **45곳에 주차장을 신규 보급**하고(77.9%, 1,123곳), 주요 상권에도 **공영주차장 보급**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·제도개선 추진

□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및 복지 확충

- **자영업자**에 대한 **4대보험 지원 강화**(복지부, 고용부 협업)
 - * 두루누리(국민연금·고용보험) 지원대상 확대(기준보수 상향 조정(190 → 210만원))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확대(50 → 60%)
- 폐업에 대비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(140 → 148만명)하고,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매칭 제도 도입*
 - * 현재 서울시, 울산시, 광주시, 제주시, 경남에서 신규가입자 장려금(1만원 내외) 매칭 지원
- 자영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, 편의시설(카페, 도서관 등) 등 복지 공간을 확충('22년까지 30개)하고, 자영업 삶의 질 지수 개발 (여가부 등과 협업)

④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가속화

개 요

- □ <u>현황</u> : 공정거래 보장, 기술탈취 근절, 협력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상생협력 정착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
 - * 대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

□ 추진방향

- 상생협력의 기본(필요조건)인 불공정거래·기술탈취는 반드시 해결
- '넛지 방식의 상생협력'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, 상생협력을 넘어 '개방형 혁신'으로 대-중소기업 간 협업을 한 단계 발전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- □ 공정 거래환경 조성과 불공정 사례는 확고히 엄단
 -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및 <mark>징벌적 손해배상제도</mark> 도입('19.7월 시행), 교육, 우수사례 확산, 상생협약 등을 통해 **공정거래 문화 조성**
 - 약정서 미발급, 부당한 대금 감액 등 수·위탁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(직권조사 매년 4~5회 운영)하여 개선을 추진
- □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더욱 강화
 - 기술자료 요구 관행 개선을 위해 비밀유지협약(NDA) 체결 의무화*, 「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」도입 등 기술보호체계 강화
 - * 대-중기 간 불평등한 지위 때문에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협약 요구 곤란 → 수·위탁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 근거 마련('19.상, 상생법 개정)
 - 기술유용에 대해 손해액의 10배의 **징벌적 손해배상제도** 도입하고, 피해기업이 아닌 가해혐의 기업에 **입증책임 부여**('19.상, 상생법 개정)

□ '넛지 방식의 상생협력'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주력

- 대·중소기업·정부가 함께하는 **상생형 스마트공장**을 구축('19. 1,000개) 하고, **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 거점**으로 육성(산업부 협업)
- **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**('19. 상생법 개정)를 통해 자발적 협력과 성과 공유를 유도하고, **2~4차 상생결제 확산**으로 풀뿌리 상생협력 실현
 - <mark>롤스로이스(영국)</mark>: 협력사와 공동 노력하여 Airbus용 엔진을 개발, 업계 시장 점유율 세계 2위로 성장하였고 협력사는 30년간 판매수입을 배분하는 계약 체결
- **생계형 적합업종 이행체계 정비*** 및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**
 - * 신청 집중(102개 업종 신청가능)에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TF 구성
 - ** 중·장기 로드맵 구축 → 핵심사업 도출 → 공동사업, R&D, 자금 등 지원
- 주요 이슈별 성과, 우수사례를 **집중 홍보하여** 대기업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**상생협력기금 출연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**
 - * 대기업 등과 대·중소협력재단의 적극적 MOU 체결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

□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을 유도

- 사내벤처, 벤처투자 등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벤처붐 조성
 - 대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, **사내창업팀**을 **지원**하고, 분사 이후에 성장할 수 있도록 **'사업화 + R&D'** 패키지 지원('19. 100억원)
 - * (대기업 등) 사내 창업팀에 선투자 \to (정부) 매칭지원('18. 1억원한도 \to '19. 5억원한도)
 - 대기업·중견기업, 선배벤처 등의 민간 여유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을 촉진
- 대·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네트워크(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) 운영
 - 대·중소기업 등 민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주목받는 R&D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술교류네트워크 구축('19.上)
 - 공모를 통해 네트워크를 지정, 네트워크에서 **발굴된 R&D과제**는 지원과제 **선정평가 시 대폭 우대**하는 등 획기적으로 지원
- ※ 개방형 혁신 관련 추가정책은 19페이지 '신규 추진과제' 참조

2 쟁점(갈등) 과제

5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

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

□ 개요 및 현황

-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**생계형 적합업종 제도* 시행**('19~)
 - * 소상공인 단체 신청 → 동반위 추천 → 중기부 지정 심의 →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 사업 제한
- 생계형 적합업종은 '19년 중 100여개^{*} 업종의 집중 신청 예상되며, 지정심의 전후로 언론·업계 등의 이슈화·이해관계 표출 가능성
 - * (신청대상) 中企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(83개) + '19년 만료예정(19개) 등
- □ <u>쟁 점</u> : 정부책임 지정, 업종별 조사분석·심의, 규제·이행강제 등 제도의 민감성을 감안한 이행체계 및 갈등관리 필요
 - * 심의사항: ①영세성(소상공인 비중, 매출·종사자 등), ②보호필요성(시장점 유율·기술격차 등), ③산업영향(R&D, 전·후방영향, 독과점·수출 ·무역·투자 등), ④소비자영향(수요공급·위생·안전 등)

□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

- 중기부·동반위·중기연 중심의 기획회의에 관계 연구기관,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신청부터 심의 완료까지 제도 전반 협업 운영
 - * (실태조사) 중기연 등 연구기관, (추천) 동반위, (심의안건) 중기부, (정책조율) 관계부처
- 실태조사, 추천 등 **주요 절차 및 경과**를 **해당 업계와 공유**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, **주요 이견을 조정***하여 **지정을 추진**
 - * 실태조사·분석 등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넛지 방식으로 업계 간 이견 조정 → 최종 이견사항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 등 협의

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추진(산업부 협업, 국정과제)

□ 개요 및 현황

-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**대형마트,** SSM 등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를 통해 상생협력을 유도
 - * 한 달에 2회 의무휴무. 자정부터 오전 10:00까지 영업시간 제한(유통법)
- 따라서, 대형마트와 유사한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영업규제 신설을 추진 중*
 - *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: 홍익표의원 대표발의('18.1.23) → 산중위 소위 계류 중

□ 쟁 점

-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**이해당사자**(복합쇼핑몰 운영자,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등) **간 갈등 발생 가능**
- 복합쇼핑몰 주변상권 활성화 기회 상실, 풍선효과로 인한 해외여행 가속화 등에 따라 내수시장이 침체될 우려

□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

-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충분히
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입법의 통과를 추진
-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조례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규정*
 - * 영업제한 규제 제외 대상 : 면세점, <u>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복합쇼핑몰</u> 內 일부매장 등
 - 따라서,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적용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

3 신규 발굴 과제

⑥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

개 요

- □ <u>현황</u> : 우리 **대기업 등은 협력사와의 혁신만을 고집**하여 신산업 발굴이 미흡하나,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AI(인공지능)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 세계를 주도
 - * 구글, 알리바바 등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은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 (구글 등 미국 5대 IT 기업은 420여개 M&A vs. 한국 대기업은 M&A에 소극적)
- □ <u>추진방향</u> : 새로운 혁신 전략으로서 대-중기, 대학, 연구기관 등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 필요
 - ※ 개방형 혁신 : 내부 및 외부기술과 아이디어 등 자원의 유출입을 활용하여 기업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시장기회를 확대하는 경영전략

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- □ 혁신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개방형 창업 공간 조성
 -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, 국내외 VC 등 **혁신주체들이 네트워킹** 하며 성장하는 **새로운 창업 공간을 국내외에 조성**
 - * 해외사례 : 중국 중관촌(창업카페 등 개방형 공간을 통해 네트워킹 활성화) 프랑스 Station-F(스타트업에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해결)
 - 혁신주체 간 자유로운 협력·교류를 위해 **업무·생활공간을 개방형** 으로 설계하고, 입주자 정주환경을 고려한 주거·문화 시설 구축
 - * 개방형 혁신 창업공간의 기본 원칙 : ①개방성, ②집적화, ③지속 가능성
 - ① (개방성) 혁신주체 간 교류가 활발하도록 개방형 업무·생활공간 구성
 - ② (집적화) 혁신주체를 집적시키고. 다른 창업인프라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
 - ③ (지속가능성) 입주자 전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, 주거·문화 공간도 제공

○ (국내 : 스타트업 파크) 지역 혁신주체뿐만 아니라 해외VC 등 해외 혁신주체들과 네트워킹하며 성장하는 「한국형 중관촌」조성

구분	1단계 : 조성(′19)	2단계 : 집적화('20~'21)	3단계 : 확장('22~)	최종(한국형 중관촌)
•	주요 • 지역 선정 내용 • 개방형 공간 구성	■ 혁신주체 입주 ■ 입주지원・활성화	■ 공간·구역 확대 ■ 지원프로그램 확대	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
내용			● 스마트 도시化	창업 클러스터

- (해외 :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)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 혁신주체와 공존하며 글로벌 개방형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전진기지 설치 추진
 -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-인도 간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설치 **MOU**(한국 중기부-인도 상공부 간, '19.2월)를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 추진

□ 전 세계 혁신주체가 모이는 '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' 개최

- 민간 주도로 페스티벌을 기획·운영하여 국내외 스타트업, VC 등이 교류하면서 투자유치, IR 등을 논의하는 '국제 축제의 장' 도입
 - * 해외 사례(Slush, 핀란드): 유럽 최대의 창업컨퍼런스로 약 2,500개사, 1.7만명 참가, 참가비는 최대 900유로
- '19.11월 한-ASEAN 특별정상회의 추진과 연계하여 '글로벌스타 트업 페스티벌' 개최 추진
 - * 동남아 스타트업, 해외유명 VC, 기업인 등 1만명 참석이 전망되는 대규모 행사

□ R&D 등을 개방형으로 전환(소통 활성화 및 과제선정을 민간이 주도)

- 민간이 상호 교류·협력하여 R&D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할 수 있는 「기술교류 네트워크」활성화
 - * 4차 산업혁명 등 유망 기술의 정보공유, 공동으로 R&D과제 발굴·사업화



- 분야별로 3~4개의 민간 네트워크를 선정,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R&D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, 향후 R&D 선정 권한을 민간이 주도
-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혁신주체들의 개방형 혁신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대학, BI 등과의 협업 프로그램 신설
 - * (例) 각 지역별 혁신센터와 시내벤처 등 간 공동 IR, 네트워킹 행사 등 콜라보 시업 운영 등

IV

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

IV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

□ 창업·재도전이 쉬워지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유니콘 기업 등이 출현합니다.

- 스타트업, 대기업, 대학·연구기관이 서로 소통하는 개방형 혁신 확산
- ㅇ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 유니콘 및 천억 벤처기업이 속속 탄생
- ㅇ 투자를 받아 창업하는 환경이 구축되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
 - * 유니콘 기업: ('18) 5 → ('19) 10개 / 벤처투자: ('18) 3.42 → ('19) 3.8조원 목표

□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제조 강국의 기반이 확충됩니다.

- 제조 중소기업의 50%가 스마트공장이 되어, 생산성은 올라가고 불량률이 감소하여 글로벌 공급망 진출이 촉진
 - * 스마트공장 구축(개) : ('14~'18) 7,903 → ('19) 4,000 → ('22) 6,200 (누적 3만개)
- 우수 기술기업 등에 대해 정책자금-공공구매-판로-수출-R&D 등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·혁신을 가속화

□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삶이 더 좋아집니다.

-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 혁신하여 성장하는 소공인·자영업이 탄생
- 지역화폐 발행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매출이 늘고 영업비용이 감소
 - * 일자리안정자금·사회보험료·근로장려금(EITC) 등 6.6조원 규모 직접지원, 카드수수료 인하·세제감면 등 1.6조원, 저리의 보증·융자 6조원 유동성 공급
- 전통시장·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, 독자 정책대상 육성 기반이 확충

□ 대·중소기업, 근로자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- 기업이 잘되면 근로자도 함께 보상받는 「중소기업 성과공유제」가 확산
-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이 공급되고, 노동자의 안전・휴식이 보장되어 청년 우수인재가 중소기업에 유입(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산업재해 22%↓)